

# 2001 地方豫算概要와

## 運用方向

이종배 /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과장

### I. 머리말

21세기에 접어들어 지방자치와 국가경제에 있어 지방재정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방예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새로워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방예산이 국가경제의 한 축으로서 IMF 경제난 극복과 월드컵 등 국가적 행사의 준비,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SOC의 확충,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이행촉진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국민의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제도의 정착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사업과 지식정보화시대의 계층간 지식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 지원사업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행·재정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런 한편, 예산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시민단체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 재정 전반의 투명성

에 관한 IMF의 검토보고서(ROSC)에  
서 지방예산에도 통합재정수지를 도입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건  
전운영은 지방예산이 당면한 과제로서  
지방재정운영의 발전을 위한 이정표이  
자 평가의 척도라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2001년 지방예산의 여  
건을 전망하고 예산운용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후, 지방예산의 개요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2001年 地方豫算의 與件

지난해 우리 경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노력에 힘입어 물가안정속  
에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4/4분기  
들어 빠른 경제회복에 대한 자만, 개혁  
모멘텀의 이완, 자금경색, 고유가 등 대  
내외 여건 악화에도 심리적 요인까지 겹  
쳐 경기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이는  
급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97	'98	'99	2000
경제성장률(%)	5.0	△6.7	10.7	9내외
소비자물가(%)	4.5	7.5	0.8	2.3
경상수지(억불)	△82	404	245	110

자료 : 재정경제부 2001년 업무보고

다만, 구조조정과 경제안정시책을 꾸  
준히 추진하면 3%대의 물가안정속에  
5~6% 수준의 성장을 이룩하고 50~  
70억불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 달성이 가  
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기상황은 국가예산보다  
지방예산에 더 큰 영향을 미쳐 2001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제 세입  
예산은 종전 국제였던 지방교육세가 제  
외되었음에도 20.3%가 증가했는데 반  
해, 지방세 세입예산은 10.7%(지방교육  
세 제외) 증가에 불과하게 되었다.

한편, 세출측면에서는 내년 5월말 개  
최 예정인 월드컵대회를 차질 없이 추진  
하기 위한 경기장시설과 도로, 지하철  
등 계속중인 각종 SOC사업의 마무리,  
지식정보화사회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부담 확대, 공무원연금부담 확대  
등으로 인하여 세출수요가 더욱 큰 폭으  
로 증가할 전망이다.

## III. 2001년 地方豫算 運用의 基本方向

2001년 지방예산은 건축재정 및 지방  
채무의 적정관리, 세출구조의 조정을 통  
한 지방예산의 생산성·투명성 제고 등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재정질서의 확립과 지식정보화·생산적 복지 실현 등 국가시책의 지방적 연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주요 운용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 가. 건전재정운영의 지속적 추진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세입확충을 위한 지구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건전재정을 위한 질서확립 및 지방예산의 생산성·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투자사업에 있어 소규모 분산투자의 억제, 『先 재원조달, 後 투자사업 결정』, ‘계속사업·미완공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운영하고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등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경상예산을 긴축운영하며, 투자우선순위와 자원배분을 연계한 전략적 재정운영을 실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재정투융자심사를 강화하고 사업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제반 주요투자사업은 반드시 투·융자심사결과에 따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였다.

또한,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채 미승인발행, 투융자심사 미실시 예산편성 등 위법·부당

한 재정행위시 교부세 일정액의 감액 등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재정패널티제를 도입하고 현재 경상경비절감 등에 도입하고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재정 분석제도와 연계한 보조적 지표로서 『지방재정운영상황측정』 제도를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측정기법을 개발하여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정례적 측정을 실시하여 지방재정관리제도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동 측정기법은 자치단체의 지구노력으로 개선이 가능한 세출중심의 측정으로 계량 및 비계량 분석을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재정분석결과와 연계하여 재정우수단체 및 진단대상단체 선정에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운영지침에 반영함으로써 측정결과를 환류(feedback)시킬 예정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순세계영여금의 일정율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하는 감채기금조례의 설치 및 기금 적립을 제도화하여 채무상환에 대비하고, 채무가 과도한 단체는 『5개년 채무감축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채무를 적극 줄여 나가도록 하고 있다.

### <지방재정운영상황측정의 측정내용과 기대효과>

측정항목	측정내용	기대효과
선심성·행사성 경비 지표	업무추진비 등의 구성비 및 증감실태	예산낭비 억제, 건전성 확보
소액투자비 지표	투자심사제의 소액사업의 구성비 및 증감실태	투자사업의 생산성 확보
투자사업관리지표	투자사업비 예산편성 및 관리 실태	투자심사이행, 용역결과 활용
경상경비지표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구성비 및 증감실태	경상경비의 절감유도

#### 나. 지방예산의 투명성 제고

금년의 지방재정운용과 관련하여 가장 큰 요구는 재정투명성의 제고라고 하겠다.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시민단체의 집행내역 공개요구 등 예산운용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고, 국제적으로도 IMF에서 재정투명성 규약(Code of Good Practices on Fiscal Transparency)을 토대로 지난 1년간 우리나라의 재정운용을 평가한 내용중에 “통합재정수지에 지방재정 포함, 기금과 특별회계 운용의 합리화 등”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가 주요 권

고사항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예산운용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뒷받침되어야 예산정보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수요자들의 요구를 적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예산정보화를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현행 지방재정 정보화 상황을 보면,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관리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DOS운영체제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3개 유형으로 나뉘어 상호 호환이 되지 않으며 자치단체별 운영범위에 편차가 있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에

산정보의 신속·정확하고 전국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지방예산운용의 정보화·투명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예산통합정보시스템(LBIS, Local Budget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을 개발하고 있다. LBIS는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관리전산시스템을 유지하되 예산편성내용을 DB로 구축하고 통합관리하되, 시·도 및 시·군·구도 행정자치부의 주전산기(server)와 연결하여 예산통합시스템의 전국 network를 구성함으로써 자치단체간 예산현황을 검색·출력, 비교분석하고 예산개요, 재정연감, 재정분석, 재정운영상황측정작업 등의 전산화와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LBIS에 축적·생산된 각종 지방재정 정보는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지방예산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방재정통계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IMF기준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를 지방재정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통합재정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공기업), 기금 등 공공부문의 총 지출규모에서 용자상환 등을 제외한 순

수재정활동이며, 통합재정수지는 순수재정수입에서 순수재정지출(통합재정규모)을 차감한 재정 적자 또는 흑자 규모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이러한 통합재정분석을 통하여 재정건전성과 함께 정확한 공공재정의 규모 및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간 공공재정규모를 비교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01년~2002년 동안 과목구조 정비 및 시범적용 등 준비기간을 거쳐, 지방재정에 통합재정수지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개혁 차원에서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복식부기 도입으로 하나의 거래를 대·차에 이중으로 기입하게 되어 예산집행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복식부기 도입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1999년 12월 시범기관(부천시, 강남구)을 통하여 복식부기 회계기준 및 회계규정과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6월 연구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본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용역을 발주한 시범기관에서 시험적용 및 보완한 후 행정계층별·지역별로 대표성 있는 10개 단체에 시범도입하여 전국 확대적용을 위한 관련법령 제·개정 및 표준화를 거쳐 전

자치단체에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 다. 미래사회에 대비한 지역 성장잠재력 개발투자 확대

미래에 대비하여 지식정보화가 촉진되고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역정보인프라 구축, 전자정부구현, 지식정보격차 해소 및 지역경제진흥을 위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해 저소득주민·장애인·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일자리 마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 등 사회복지확충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하수도시설 확충, 환경친화적 녹지공간을 적극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국가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한 재정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지방투자예산을 금년 상반기에 80% 이상 배정하고, 특별교부세·지방양여금도 지역경제활성화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등 당

면한 국제행사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월드컵개최도시 및 광역단체의 월드컵경기장 건설 등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기개최와 관련한 도시기반시설확충, 관광객유치를 위한 환경정비 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 IV. 2001年 地方豫算의 概要와 特徵

### 1. 2001 지방예산 총규모

2001년도 국가와 지방의 당초예산 총규모(순계)는 199조 2,824억원이며 이 중 지방예산이 64조 4,892억원으로 32%를 차지하고 있다. 2001년도 지방예산의 순계 총규모는 2000년 당초예산 대비 16.2%가 증가하였지만, 지방교육세(2조 9,767억원)를 제외할 경우 10.8% 증가에 불과하고, 2000년 최종예산 65조 549억원보다는 0.9% 감소한 규모다. 세입구성을 보면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이 33.2%를 차지하고 있다(<표 1> 참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6%인 49조 564억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40조 5,097억원에 비하여 21.1% 증가하였고,

**<표 1>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순계규모 비교**

(단위 : 억원)

2001 총예산규모(중앙+지방) 199조 2,824억원							
중앙정부		자치단체 64조 4,892(32%)					
134조7,932(68%)		의존재원 21조 4,236(33.2%)			자체재원 43조 656(66.8%)		
국세	기타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958,991	388,941	84,604	41,133	88,499	234,748	172,437	23,471
(71.1%)	(28.9%)	(13.1%)	(6.4%)	(13.7%)	(36.4%)	(26.7%)	(3.7%)

특별회계가 24%인 15조 4,328억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2.9% 증가하였는데, 일반회계 증가율이 특히 높은 것은 지방교육세가 신설된 것이 주요인이라 하겠다(<표 2> 참조).

최근 5년간의 예산증감추세를 보면,

올해가 가장 높은 16.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교육세의 신설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에는 10.8%로 2000년도의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이다.<표 3> 참조

3> 참조

**<표 2>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억원)

구분	2001	구성비(%)	2000(당초)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합계	644,892	100	555,088	100	89,804	16.2
일반회계	490,564	76	405,097	73	85,467	21.1
특별회계	154,328	24	149,991	27	4,337	2.9

**<표 3> 연도별 예산규모 신장추세**

(당초예산기준, 단위 : 억원)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예산규모	532,424	577,553	500,654	555,088	644,892
전년대비증가액	59,926	45,129	△ 76,899	54,434	89,804
증가율(%)	12.7	8.5	△ 13.3	10.9	16.2

## 2. 자치단체별 예산규모

자치단체별 예산규모를 보면 광역단체가 60.7%인 39조 1,478억원, 시가 22.5%인 14조5,364억원, 군이 11.6%인 7조 4,775억원, 자치구가 5.2%인 3조 3,275억원으로 구성되어 광역 대 기초자치단체의 예산구성 비율이 61 : 39로 나타났다. 예산증가율은 광역자치단체가 20.3%, 기초자치단체가 10.4%이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합친 지역별 예산규모를 보면 서울지역이 19.3%인 12조 4,577억원, 6개 광역시 지역이 21.0%인 13조 5,349억원, 도 지역이 38조 4,966억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0년도와 대동소이한 분포이다(<표

4> 참조).

시·도별 분포를 보면, 서울특별시가 전체규모의 19.3%인 12조 4,577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10조 3,149억원, 경남이 5조 1,604억원, 경북이 4조 7,537, 전남이 4조 3,184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 3. 2001 지방예산의 분석

### 가. 세입구조

2001년도 지방예산규모(순계)의 세입별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전체의 36.4%인 23조 4,74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이 26.7%인 17

<표 4> 자치단체별 예산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001		2000		증(△)감	
		(당 초)	구성비		구성비		%
지역별	· 서울	124,577	19.3	106,981	19.3	17,596	16.4
	· 광역시	135,349	21.0	117,214	21.1	18,135	15.5
	· 도	384,966	59.7	330,893	59.6	54,073	16.3
계		644,892	100	555,088	100	89,804	16.2
단체별	· 시·도	391,478	60.7	325,530	58.6	65,948	20.3
	· 시	145,364	22.5	133,751	24.1	11,613	8.7
	· 군	74,775	11.6	65,330	11.8	9,445	14.5
	· 자 치 구	33,275	5.2	30,477	5.5	2,798	9.2

주) 지역별구분 : 광역+기초자치단체 예산액



&lt;표 5&gt; 시·도별 예산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회계별			단체별		2000(당초) (B)	증감율 (A/B)
	계(구성비) (A)	일반	특별	시·도	시·군·구		
합 계	644,892(100)	490,564	154,328	391,478	253,414	555,088	16.2
서울	124,577(19.3)	94,651	29,926	106,097	18,480	106,981	16.4
광역시	135,349(21.0)	87,249	48,100	117,153	18,196	117,214	15.5
부산	38,096	24,449	13,647	33,118	4,978	32,144	18.5
대구	25,142	16,320	8,822	22,132	3,010	25,981	△3.2
인천	30,194	19,266	10,928	25,752	4,442	22,484	34.3
광주	17,364	10,207	7,157	15,370	1,994	13,811	25.7
대전	14,794	9,397	5,397	12,839	1,955	14,767	0.2
울산	9,759	7,610	2,149	7,942	1,817	8,027	21.6
도	384,966(59.7)	308,664	76,302	168,228	216,738	330,893	16.3
경기	103,149	76,352	26,797	44,521	58,628	84,875	21.5
강원	31,841	27,199	4,642	12,315	19,526	27,385	16.3
충북	23,940	19,733	4,207	11,013	12,927	21,020	13.9
충남	35,890	27,885	8,005	16,595	19,295	31,548	13.8
전북	35,135	29,366	5,769	16,057	19,078	29,028	21.0
전남	43,184	36,714	6,470	20,131	23,053	42,175	2.4
경북	47,537	41,027	6,510	19,083	28,454	39,558	20.2
경남	51,604	39,355	12,249	22,290	29,314	44,597	15.7
제주	12,686	11,033	1,653	6,223	6,463	10,707	18.5

조 2,437억원, 지방채가 3.7%인 2조 3,471억원으로 자체재원이 66.8%인 43조 656억원이며,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13.1%인 8조 4,604억원, 지방양여금이 4조 1,133억원, 국고보조금이 13.7%인 8조 499억원으로 의존재원이 33.2%인 21조 4,236억원을 차

지하고 있다(<표 6> 참조).

세입원별 증감내역을 2000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지방세 26.7%, 세외수입 4.9%, 지방교부세가 19.3%, 지방양여금이 21.3%, 국고보조금이 19.8% 증가하였는데 반해 지방채는 12.7%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지방예산이 건전한 방향

<표 6> 세입원별 증가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지방채
2001년도(A)	644,892	234,748	172,437	84,604	41,133	88,499	23,471
구성비(%)	(100)	(36.4)	(26.7)	(13.1)	(6.4)	(13.7)	(3.7)
2000년도(B)	555,088	185,209	164,305	70,909	33,920	73,845	26,900
구성비(%)	(100)	(33.4)	(29.6)	(12.8)	(6.1)	(13.3)	(4.8)
A/B(%)	16.2	26.7	4.9	19.3	21.3	19.8	△12.7

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1년도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7.6%로 2000년도(당초예산 기준)의 59.4%보다 1.8% 낮아졌다. 2001년도의 경우 의존재원의 증가율이 자체재원의 증가율보다 높아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원여건에 따라 광역·기초간, 도시·농촌간 상당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94.9%, 광역시

69.6%, 도 35.2%, 시 49.6%, 군 21.0%, 자치구 45.0%로 나타나고 있다(<표 7> 참조).

2001년도 지방예산에 편성된 국고보조금(총계)은 총 8조 8,499억원으로 2000년 7조3,845억원보다 1조 4,654억원 증가되어 19.8%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각 중앙부처를 통해 파악한 국가의 국고보조사업예산은 10조 3,494억원, 지방비 부담액은 5조 5,234억원이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경우도 지방자

<표 7> 2001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

구 분	전 국	시·도	시	군	자치구
전 국	57.6	59.8	49.6	21.0	45.0
서울	95.6	94.9	-	-	52.4
광역시	69.6	58.7	-	39.6	38.0
도	35.2	34.4	49.7	20.0	-

주) 전국 및 시·도별 재정자립도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순계규모를 사용하고, 개별 단체로 재정자립도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총계예산규모를 사용

치단체의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각각 8조 4,604억원과 4조 1,133억원이지만 국가의 배정 확정액은 각각 9조 3,121억원과 4조 7,795억원이다.

이처럼 의존재원의 경우 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된 규모와 국가의 배정 확정 규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국가 지원예산의 확정 내시가 지방예산 편성시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부처에서는 회계연도 하반기까지도 국고보조금의 배정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세입내역을 종합해 보면, 올해의 지방예산도 종전과 같은 취약성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 조세에 대한 국세대 지방세의 비율이 형식적으로는 80:20으로 작년의 81:19보다는 증가하였지만 종전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액 전출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할 경우 83:17로 오히려 지방세의 비중이 낮아지게 되었다. 또한,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주요 자체재원인 세외수입도 소비와 부동산경기의 지속적인 위축으로 작년 대비 4.9% 인상되는데 그쳤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세수결손도 발생하였다. 반면, 교육재정지원 증가, 생산적 복지제도 정착을 위한 재원부담 증가, 사업 단가 상승 등으로 세출수요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에 대한 충족율은 지방교부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2%에서 올해는 78%로 14%나 낮아졌다.

## 나. 세출구조

2001년도 지방예산규모(순계)를 세출성질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23.3%인 15조 190억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10.4%인 6조 6,877억원이고 사업예산은 54.8%인 35조 3,105억원, 채무상환이 5.8%인 3조 7,464억원, 예비비등이 16.1%인 10조 4,133억원이다. 이를 2000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총예산규모는 16.2%가 증가하였으며 부문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7.7%, 사업예산은 11.8%, 그리고 예비비등이 57.6% 증가하였다(<표 8> 참조).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공무원연금부담 증가 등이 주된 인상요인이고, 사업예산은 지역사회개발비가 60%이상, 건설관리비가 30%이상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예비비등은 다른 부문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의 급증에 따른 것으로 전액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지방교육세의 신설, 시·도세 전출비율 인상

**<표 8> 세출성질별 구성**

(단위 : 억원)

구 분	2001	구성비(%)	2000(당초)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644,892	100	555,088	100	89,804	16.2
○ 경상예산	150,190	23.3	139,401	25.1	10,789	7.7
- 인건비	66,877	10.4	63,364	11.4	3,513	5.5
- 경상적경비	83,313	12.9	76,037	13.7	7,276	9.6
○ 사업예산	353,105	54.8	315,931	56.9	37,174	11.8
- 보조사업	198,706	30.8	177,015	31.9	21,691	12.3
- 자체사업	154,399	24.0	138,916	25.0	15,483	11.1
○ 채무상환	37,464	5.8	33,667	6.1	3,797	11.3
○ 예비비등	104,133	16.1	66,089	11.9	38,044	57.6

(2.6%→3.6%), 종전 서울특별시(100%)와 부산광역시(50%)만 부담하던 중등공립교원 봉급 부담 대상의 기타 광역시 및 경기도로의 확대 및 공무원보수체계 개편(기말수당의 봉급화)에 따른 중등교원 봉급의 인상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세출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사회개발비가 49.8%인 32조 1,342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제개발비가 27.5%인 17조 7,510억 원, 일반행정비가 17.0%인 10조 9,547억 원 지원및기타경비가 3.9%인 2조 2,851억 원 순으로 편성되었다. 또한, 이를 2000년도와 비교하면 지원 및 기타경비가 35.6%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가 23%, 일반행정이 17.8%, 민방위 8.2%, 경제개발이 3.2% 증가한

**<표 9> 기능별 세출구조**

(단위 : 억원)

구 분	2001	구성비(%)	2000(당초)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644,892	100	555,088	100	89,804	16.2
일반행정	109,547	17.0	92,987	16.8	16,560	17.8
사회개발	321,342	49.8	261,008	47.0	60,334	23.1
경제개발	177,510	27.5	172,011	31.0	5,499	3.2
민 방 위	11,642	1.8	10,756	1.9	886	8.2
지원및기타경비	24,851	3.9	18,326	3.3	6,525	35.6

것으로 나타났다.<표 9>참조).

이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비(지원및기타경비) 증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로 인한 사회복지예산(사회개발비)의 증가, 그리고 공무원연금부담(일반행정비)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하겠다.

## V. 맺음말

금년도 지방예산은 경기성장세의 둔화 등으로 인해 세수증가는 둔화되어 있는 반면, 경기둔화에 따른 실업 및 지난해 10월 도입된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지출과 교육재정지원 확대,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단위 SOC투자, IT·BT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의 육성과 월드컵·아시아게임 등 국제대회준비의 마무리 등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운용의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재정운용을 통하여 재정수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국가적 과제인 경제활력회복을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급증하고 있는 실업난 완화를 위하여 각종 투자사업을 조기에 발주하

여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재정운영에 대하여는 그동안 낭비성·선심성 예산집행에 대한 비난여론이 많았고, 시민단체의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특히 내년 상반기의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올해에는 선심성 재정운영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하여 불건전재정운영상황측정제도 도입과 불건전재정운영 상황에 따라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렇지만,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은 자치단체 스스로의 책임재정 실현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무엇보다도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고 절실하다고 하겠다. ☺

